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7
VOL. 680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인
제헌절을 기념하며
국회는 헌법 이념 수호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July
Vol. 68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7월 3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홍형선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보좌관), 윤희진(선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 김진표 국회의장, 헝가리·체코 공식 방문
- 김진표 국회의장, 피지·뉴질랜드 공식 방문
- 김영주 국회부의장, 몽골 국회에서 기초연설
-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라크 부의장·인니 상원부의장 면담
-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 위한 MOU 체결

15 특집 - 인구 위기와 이민정책의 방향

-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을 하락, 이민정책으로 풀어가야 _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
- 이민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_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_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질서 있는 이민'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도모해야 _윤인진 고려대 교수

24 위원장에게 듣는다 _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

"튼튼한 국방정책, 올바른 안보관 만드는 데 일조할 것"

26 길에서 길을 찾다 _홍석준 의원

대구의 '경제 1번가' 달성구

30 의원의 좌우명 _김화재 의원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32 칭찬합시다 _이재정 의원

김태호 의원이 이재정 의원을 칭찬합니다

34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박수영 의원

30년 행정 달인의 "국민 주름살 펴기"

36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저출산 문제 해결,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전세제도 개혁 방안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CONTENTS



24



26



30



32



34

45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일일초

46 함께하는 국회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

48 법률, 시대를 읽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_이상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50 주재관 리포트
독일의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 _이윤국 국회 독일 주재관

53 이달의 청원

54 위원회는 지금
2030부산세계박람회 PT 준비상황 점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논의

58 국회 뉴스

62 법 시행 그 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64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법률안 25건 의결

66 만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68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스마트폰 시대가 불러온 새로운 거리의 개념
_김동철 박사

70 국회 사람들
"객관성·공정성 지키며 시청자 사랑받는 국회방송
'국회라이브' 만들 것" _송경철 국회방송 앵커

72 이달의 서평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_정민아 교수

74 고전에서 읽는 지혜
독특한 성리학자 기정진의 '노사집(蘆沙集)
_박석무 석좌교수

76 국회 미술관
윤리의 나라 조선의 다산 정신 _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79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80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복장이 그게 뭐예요! / 제대로 입었습니다
_유점임 속기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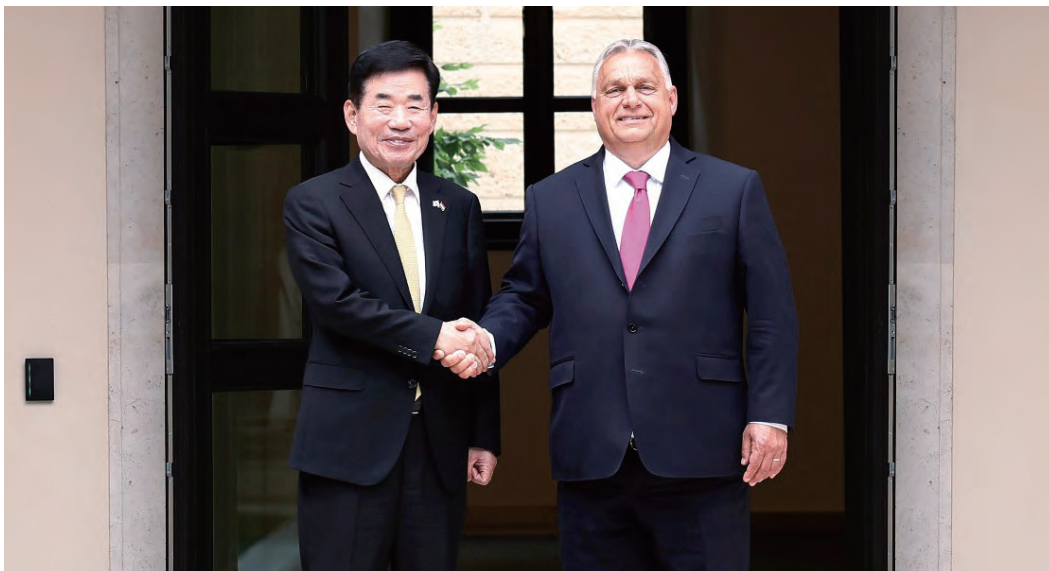
82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선자령 '바람의 언덕'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86 생활 속 우리말글
존대법의 어려움 _김풍기 교수

88 정치 관련 주요 일지

김진표 국회의장, 헝가리·체코 공식 방문

헝가리 대통령·총리·국회의장과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지도자 잇따라 만나 전방위 경제외교 펼쳐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5일 헝가리 총리실 앞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간 헝가리·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대통령·총리·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자로)·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헝가리와 체코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헝가리 정부·국회에 인재 양성, 비자 발급 시간 단축 등 관심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4일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로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삼성SDI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여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김 의장은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5일 헝가리 대통령궁에서 커터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헝가리 입국 시 비자 발급 어려움에 대해 청취한 뒤 이를 헝가리 의회 및 정부에 알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날 라슬로 피비르 국회의장,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전달하고 인재양성 방안과 비자 발급 시간 축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피비르 국회의장은 특히 “삼성SDI와 동포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주시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피비르 국회의장은 한국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헝가리에서 다시 만나면서 더욱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양국 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갖고 자동차·배터리·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어진 노박 대통령, 오르반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양국 협력이 속도를 낸다면 함께 윈-윈 할 것”이라며 두 나라의 협력 확대가 양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두 지도자도 공감했다.

김 의장은 노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전 세계 공통 문제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박 대통령은 한국이 9월로 예정된 부다페스트 인구정상 회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르반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SMR 협력, 인력난 해소 등이 논의됐다. 김 의장이 우리나라의 SMR 경쟁력을 강조하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원자로에 관심이 많다. 소형모듈원자로뿐 아니라 큰 원자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며 SMR 및 원전 사업협력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장이 제안한 한국 기업과 헝가리 대학을 연계한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7일 체코 하원의회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김 의장은 헝가리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2030부산국제박람회 유치 지지를 표명한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 지지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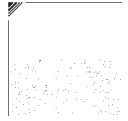
3일 간의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체코로 이동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7일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체코 상·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코바니 원전 5호기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2030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한수원의 기술과 역량에 대해 신뢰를 표했고, 원전뿐 아니라 SMR, 방산, 고속철

도, 정보통신 분야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먼저 아다모바 하원의장과의 업무 조찬 회담에서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능력, 높은 기술력과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약 8조 원 규모로 현재 우리나라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등이 경쟁하고 있다.

또한 김 의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부산의 높은 경쟁력을 소개하면서 체코의 지지를 요청하자,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부산 방문은 감동이었고,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 입장을 우리 정부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방문단이 6월 7일 체코 상원 나이츠홀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 전달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어진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업무 오찬 회담에서는 SMR 및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 협력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이 “SMART(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 경제성을 강화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과 체코의 원전 협력이 제3국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자,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올해 가을 체코 상원에서 SMR 관련 학술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국 측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비스트르칠 의장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을 원한다”고 밝히자, 김 의장은 “한국 정보통신 분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체코 정부 또는 기관과 한국 기업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나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유럽의 자동차 전환 가속화 전략에 따라 전기차 현지 생산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인 HMMC(현대자동차 체코 생산법인)의 계획 및 8월로 예정된 2세대 전기차 양산 기념행사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체코 상·하원 의장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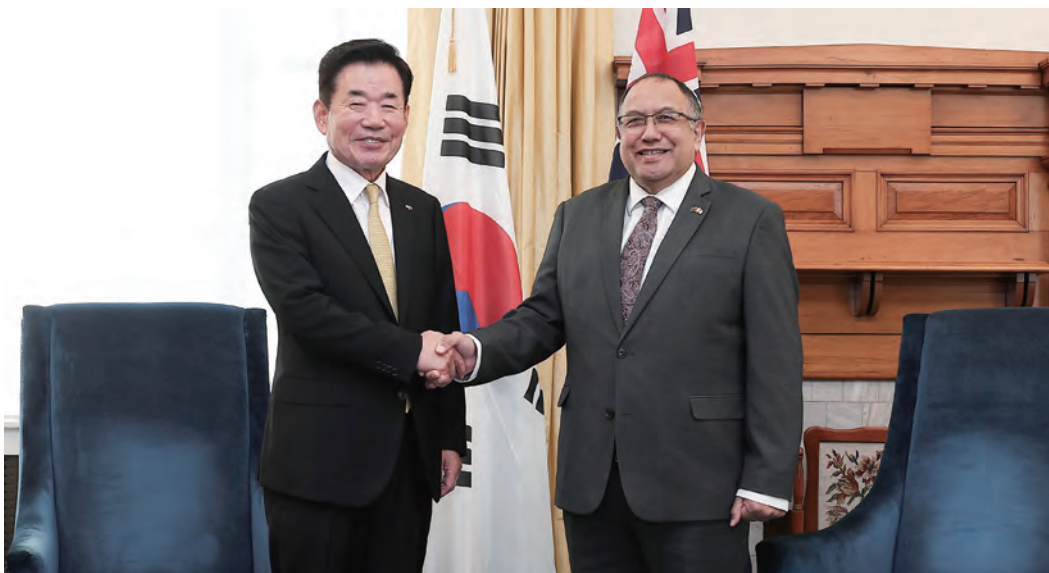
특히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체코도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면서 현지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현지 대학이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체코 상·하원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8일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격려 방문 및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는 신동근·조웅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피지·뉴질랜드 공식 방문

피지 대통령·국회의장, 뉴질랜드 국회의장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보 총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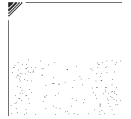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27일 뉴질랜드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웨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간 피지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의 호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장은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펼쳤고, 그밖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해양수산·관광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윌리엄 메이바릴리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나리카마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피지 측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공고히 다지고,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먼저 피지의 수도 수바 대통령궁에서 카토니베레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궁에 입장하며 방명록에 “이번 방문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피지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대표단이 6월 23일 피지 수바 대통령궁에서 카토니베레 피지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수교 52주년이 된 한·피지 관계는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형제로서 의장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기술 선도국인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양국은 수교 이래 개발협력, 기후변화,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며 “지난 5월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양국이 상생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피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피지가 태평양 지역 내 중심국가인 만큼 부산 지지를 위해 주변국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고,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이는

태도국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으로, 피지 역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과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해 협력하길 원하며, 한국과 피지가 고위급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국은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지의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력 제고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피지 수바 펄 리조트 내 면담장으로 장소를 옮겨 피지 나िका마 탈라발라부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작년 12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의장님의 지도력에 힘입어 피지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역대 최장수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의장님 재임기간 중 피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한·피지 간 우호협력 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23일 피지 라라발라부 국회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회담을 하고 있다.

계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나아가 “한국은 피지와 반 세기 이상 외교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오랜 친구이므로 가능하면 부산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길 바라며, 다른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라라발라부 의장은 “한국이 원하는 바를 정부 측에 전달 하겠고, 부산 지지를 위해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등 한국을 돕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 라라발라부 의장은 “한국은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2019년 중단된 한국과 피지 간 직항노선이 재개되길 원한다”고 요청했으며, 김 의장은 “지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한-피지 공동운항 MOU(5.31)가 인적교류 재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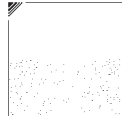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의 간담회로 뉴질랜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및 가

족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 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뉴질랜드 국회의장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

다음날인 6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웨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했으며 의회 교류와 교역 및 보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 26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전용사 피터 무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만의 이번 방문이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과 루라웨 의장은 교역·경제협력, 보훈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교역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교역액(총 53억 불)이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며 “향후 양자(FTA), 소다자(DEPA), 지역(RCEP), 다자(IPEF) 등 촘촘히 구성된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양국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고 전쟁기념관에 입장해

헌화했다. 이어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을 추진 중인 예정 부지를 시찰하며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김창식 주뉴질랜드 대사 및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환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며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의회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양국의 가교가 돼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8일 오클랜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끝으로 9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는 서삼석·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몽골 국회에서 기조연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월 13일 몽골 울란바토르 국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6월 13일 몽골 국회에서 열린 ‘범알타이 지속가능대화’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되어 ‘젠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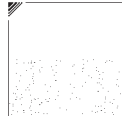
이번 기조연설에서 김 부의장은 아시아 여러 국가 여성들이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가 30여 년 넘게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걸어온 노동운동가와 정치가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확대돼온 역사를 공유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연설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것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의 이번 기조연설은 범알타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각국의 컨퍼런스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

한편, ‘범알타이 지속가능대화’ 컨퍼런스는 ‘환태평양 지속가능대화’의 소지역 대화 중 하나로 반기문 재단, 스탠퍼드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이화여대, 몽골 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김영주 부의장은 올해 2월 몽골 순방 시 몽골 국회의장으로부터 공식 초청받았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라크 부의장·인니 상원부의장 면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6월 15일 국회 본관에서 인도네시아 상원의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6월 15일 국회부의장실과 국회접견실에서 샤크완 달라위 이라크 국회부의장과 마후딘 인도네시아 상원부의장을 각각 접견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각국 대표단에게 의회 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정 부의장은 달라위 이라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자밀 무타위 의원, 니스린 알자프 의원 등 이라크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이라크와 같이 전쟁 등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수요에 적합한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과 입법 관련 양국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이라크 내 중단된 우리 기업의 사업이 이라크 신정부 출범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타협안이 합의됨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마후딘 인도네시아 상원부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상원의원들을 만나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비약적으로 진전된 협력관계에 대해 “지난 푸안 하원의장 방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의회 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기쁘다”고 찬평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올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마후딘 상원부의장 역시 양국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가 간 원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 위한 MOU 체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6월 16일 인사혁신처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 자료의 공유·활용, 강사 교류 및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혁신처와 공동 활용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국회 관련 교육을 협력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도자의 역량 크기만큼 사회가 성장한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조직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국회사무처와 함께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박용수 인사관리국장, 황인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



특집

인구 위기와 이민정책의 방향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민정책이 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현황, 인식전환의 필요성,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 이민정책으로 풀어가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선임연구위원

이민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한국이민정책학회장

‘질서 있는 이민’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도모해야

윤인진 고려대 교수·아시아이주연구센터장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 이민정책으로 풀어가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에 0.78명까지 하락하면서 인구 수 유지를 위한 수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보다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결국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구감소의 결과로 가장 직접적으로 관측될 현상은 경제성장률 하락일 것이다. 생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대인 15~64세를 생산연령인구라고 부른다. 생산연령인구의 변화를 보면, 2000년에는 1990년 대비 400만 명이 증가했고, 2010년에는 여기에 251만 명이 더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17만 명이 추가로 증가했다. 그런데 출산율이 장기간 하락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에 2020년 대비 357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며, 2040년에는 여기에 529만 명이 더 감소하고, 2050년에는 433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생산연령인구 1명이 2020년에는 자신을 포함해 1.4명을 부양해야 했는데, 2050년에는 2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속히 확대된다는 뜻이다.

과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년에 대략 2%p씩 하락해 왔다. 경기변동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세는 2%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노동투입의 증가다. 과거에 노동투입은 우리 경제의 성



정규철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장률에 대략 1%p 정도 기여해 왔다.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동투입도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산연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노동투입이 앞으로는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또 다른 동력은 생산성 향상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에 생산성은 1년에 1.9%씩 증가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고 2010년대에는 0.7%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201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한 주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증가세가 앞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로 하락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 결과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망한 것으로,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전에 우리 경제는 역성장을 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게 된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1월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세수 여건은 나빠지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다. 경제 규모(GDP) 대비 국가채무가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데,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면

재정건전성은 쉽게 악화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은 필요하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은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상당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개선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이 가까운 미래에 개선되더라도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생산연령인구가 확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출산율을 이른 시점에 개선하기 어렵다면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육아기의 여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편이다.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가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력 수용이 현실적·효과적 방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데 외국인력 수용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력 수용은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 공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방사회·포용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가 진행될수록 인력난이 심해지고, 경제성장률 하락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력 수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민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적 해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관련 제도와 현실의 상황을 좀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민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된 2007년을 기점으로 2007년 이전은 ‘외국인 출입국관리정책’ 시기로, 2007년 이후는 ‘포괄적 이민정책’의 시기로 구분된다. 2007년에는 기본법 제정 외에도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및 사회통합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했다. 또한 새로운 법과 조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정책블모지’였던 이민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싱크탱크(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도 함께 시작됐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부 조직, 그리고 연구 기반 등 인프라의 최소한 기본은 갖추어진 셈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8년부터 매 5개년 단위의 범정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필두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그리고 중앙부처 및 중앙-지방 간 정책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이민정책이 추진돼 오고 있다. 지난 15년간 범정부 이민정책은 19개 중앙행정기관(15개 부처, 1개 위원회, 3개 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과제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이민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총 1천241개의 과제가 수행됐고, 6천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다음으로, 지난 15년간 이민정책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자. 정부 수립 60년 만인 2007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했으나 그 후



조영희 연구교육실장
이민정책연구원

200만 명을 넘어서는 데까지는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교육, 가족, 문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의 수가 급증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 235만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이 중 9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기체류자 수는 215만여 명이다.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전국 86곳에 달해

외국인 인구의 규모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국 수준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의 비중은 대한민국 총인구의 4.1%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보면 비중이 더욱 높다.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전국에서 86곳에 달한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인구가 이미 10%를 넘어선 곳이 11개 지역이다(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안성시, 포천시, 음성군, 서울 중구, 진천군, 영암군). 이러한 현실은 각급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을 지역의 생산(노동)인구, 소비인구, 납세인구, 복지와 교육의 대상인구인 이른바 ‘생활인구’로 인식하는 이민정책으로의 변화를 촉진한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생활인구’로 공급하는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계한 최초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시도의 성패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해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문제, 외국인의 체류 질서와 안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적 반감을 낮추고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문제 등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해법을 마련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단순기능인력 유입 통로인 고용허가제 기반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숙련기능인력 범주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외국인력 수급 전망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산업 분야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체계(공급-활용-지원)도 없다. 4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법무부에만 책임이 맡겨져 있을 뿐,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체류 질서 유지에 투입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수가 300여 명에 불과해 행정역량이 매우 취약하고, 경찰의 협력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외사경찰의 업무 축소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특정 국가 국민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송출국의 책임을 따져 묻는 외교적 대응 협력도 부재하다. 이민정책이 외국인의 유입 문호 개방이라는 오해,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오는 갈등은 경제침체와 같은 위기 시 국민의 여론을 양극단으로 갈라치기 할 수 있다.

인구위기 시대에 이민정책을 잘 활용하려면 2007년에 기본만 갖추고, 사실상 15년간 ‘정체된’ 법을 변화한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정부 조직역량을 확충하며, ‘난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연구를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2015년에 중앙정부 모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연구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전반적인 질문으로, ‘협력의 대상으로서 이민자를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58.3%가 ‘공감한다’고 했다. 유사한 수준에서, ‘이민자가 국가경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기여한다’는 응답이 59.3%를 차지했다.

그런데 질문을 구체화해 ‘응답자의 자녀나 손자녀가 이민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21.3%만 ‘찬성한다’고 했다. ‘이민자의 빈곤 해소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6%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민정책 관련 질문이 실제 삶과 가까워질수록 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주소

이러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악화되었다. 2019년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정책 방향에 관한 설문에서 이민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51%지만, 반대하는 측은 49%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정부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 이슈가 구체화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질 때 그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병기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한국이민정책학회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및 지역위기와 이미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민정책은 사실상 현재 남아 있는 우리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갑론을박만 되풀이하면서 소모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없다는 이야기다.

장기적 시각에서 이민정책 봐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 더하여, 이민정책은 특별히 더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영역이라는 데서 정책 인식의 중요성이 크다. 첫째, 소위 이민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여러 국적의 인민으로 구성된 상태에서부터 시작했거나, 식민지 보유의 역사를 통해 이민자를 겪어보고 함께 살아본 경험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채감도 작용함으로써 그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토양이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정책 인식이 이민정책 선진화의 기반이 된다는 말이다.

둘째,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그만큼 정책 시계(視界)를 길게 봐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조직혁신을 위한 이미지의 힘을 강조한 조직학자 가레스 모건(G. Morgan)의 주장처럼, 그 구성원들에게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인식 상의 그림이 생성돼야만 전략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국으로 이민을 나가기만 했지, 외부로부터 국제이주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본 경험과 부채감이 존재할 리 없는 국민에게 이민자가 바로 이웃에 살고, 그들과 사돈이나 친

척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기꺼이 지라는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더 큰 인내와 용기가 우리나라와야 하는 것이 이민정책이다.

국민 인식 전환 방안

이민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긴 만큼 더욱 정교하게 정책과제를 설계해야 하고, 그 정당성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어진 시한 내에 완벽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민정책은 특별히 더 국민의 인식적 지지가 긴요한 만큼, 이러한 완성도 높은 정책 준비를 활용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설득 활동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첫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세계시민국가로 거듭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민정책에 절실한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가며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해주어야 한다.

둘째, 공직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과 정책의 칸막이를 고수하는 태도를 버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달체계 합리화에 뛰어들어야 한다.

셋째, 학자와 전문가들은 완성도 높은 정책설계를 위한 연구와 전략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적정인구 규모 산정과 그에 기초한 이민자의 분야별 역할 모델 수립이 대표적인 예다. 🍌

‘질서 있는 이민’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도모해야

2023년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1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 부양비는 증가해서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은 인구소멸 위협에 처해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성장이 멈추고, 생산 대신 소비에 열심이고, 도전 대신 안전을 택하는, 한 마디로 ‘쫄그라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민이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해법이지만 이민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민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경제적 위협,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위협,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화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반인들은 이민자를 한국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현재 우리는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결국은 쇠약하는 길로 가는 ‘예정된 미래’와 생소하고 위험하지만 기회의 땅으로 가는 ‘미지의 미래’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윤인진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아시아이주연구센터장

이민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민정책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이민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서 현재 제도를 유지하거나 땀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영주권으로의 전환이나 가족 결합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2018년에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들어서 숙련된 기능 보유자에게 10년까지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일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정주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에 앞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구감소,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민을 통해 신규 노동력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이민 선진국의 이민정책은 공통으로 고학력, 전문직, 기술직 이민자와 유학생 등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단기체류에서 영주 및 국적취득까지 체류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이민자의 거주국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선진국이 이민정책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국경 통제의 실패,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반이민자 정서 등으로 인해 서구 국가들은 이민자와 선주민 간에 화합과 공생 대신 분열과 고립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는 성숙한 사회발전 단계에 도달한 국가에서 이민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참으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운 국정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자립 능력을 갖지 못한 이민자와 난민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급격하게 받아들일 경우 역풍을 받아 이민정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서구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민으로 인한 이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민에 대한 내국인의 우려를 줄이는 방법이 '질서 있는 이민'이다. 질서 있는 이민이란 정부가 이민자의 규모와 자격 요건, 그리고 거주국 내 사회구성원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내국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이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일반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이민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민정책을 인구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경제정책, 문화다양성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국가발전정책의 중요한 고리로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진 이민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전담부서, 예를 들어 이민청과 같은 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세계의 이민과 디아스포라(Diaspora)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는 문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민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역사에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과 같은 국가는 종교적 관용성, 개방성, 실용주의를 실천해 해외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을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 반대로 종교적 배타성, 폐쇄성, 원리주의를 고집한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대인, 모리스코, 위그노와 같은 앙트레프레너(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를 추방해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제국의 흥망성쇠에 디아스포라와 이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이민자들을 새로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든든한 국방정책, 올바른 안보관 만드는 데 일조할 것”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Q. 국방위원회 소개와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방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방, 안보와 관련한 여러 현안과 과제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방, 안보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1대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방정책에 있어 한 당의 국방위원이 아닌 여야를 아우르는 조화와 협력을 통해 그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거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제21대 국방위의 성과로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제도에 따르면 차륜형장갑차의 경우 설계·제작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나, 실제 소요결정 이후 전력화까지 10여 년이 걸리고, 장갑형의무후송차량이나 비호복합 체계개발의 경우에도 설계·제작은 24개월 미만이 걸리나, 실제 전력화는 소요결정 시점부터 수십 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즉, 전력화될 때쯤이면 이미 구식무기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통해, 인공지능(AI)·무인·드론 등 민간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신속획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이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의 부칙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전체 계급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제도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진정한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위는 지난해 11월 18일 형식적 추서제도 대신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 등 각종 급여 및 예우를 보장하는 취지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Q. 올해 꼭 해결해야 할 국방위의 주요 현안이나 입법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 파도에 휩쓸려 군대에 갈 자원이 없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청년세대인 초급간부와 군무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수당 및 여비 현실화 문제와 대상별 맞춤형 관리, 위라벨 보장을 위한 문화 확립 등을 포괄하여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인 가족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인 만큼, 군 가족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맞춤형 정책들을 논의 중입니다.

덧붙여, 병에 대한 처우 보장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률적인 월급 인상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특수업무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통해 복무 여건에 따른 ‘공정’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병역의무의 실질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軍)별 근무지역·근무여건·병과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근무 강도나 여건에 따라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선택복무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병역법’이 국방위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정치 철학과 더불어 여야 위원님께 덕담을 겸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제18, 19,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줄곧 국방위를 했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지난 40년간 군에서 생활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슴속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았고,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경험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국방정책, 부당한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 든든한 국방정책을 만들고 아울러 올바른 안보관, 튼튼한 국가관을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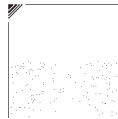
아울러 최근 국제 질서를 보면 경제와 안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된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안보를 과도한 경쟁화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경제안보시대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 이전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국회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과 대립으로만 몰고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 무운장구하여 우뚝 설 수 있도록 국회가 뒤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대구의 '경제 1번가' 달서구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6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대구를 찾았다. 홍석준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홍 의원은 대구시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고, 대부분을 경제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국회에서도 ‘경제전문가’로 이름난 의원이다. 공무원 시절, 대구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로봇산업진흥원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대구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전문가’라는 이미지와 달리 그는 의외로 지역주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 하나를 꼼꼼히 챙기는 ‘민생 밀착형’ 정치인이기도 하다. 산업단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공존하는 대구 달서구에서 홍석준 의원을 만나봤다.

홍석준 의원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 공원에 위치한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 안전 기원비’ 앞에 섰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다섯 명의 아이들이 도롱뇽알을 찾겠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된 뒤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가로 3.5m, 세로 1.3m, 높이 2m 규모의 추모·기원비는 실종 아동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세워졌다.

홍 의원은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난 뒤 범죄 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와룡산에서 내려온 뒤 홍 의원은 인근 이곡중학교에 들러, 새로 개설된 통학로를 점검했다. 통학로를 여기저기 살펴보던 홍 의원은 “이곳 통학로 개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 했다. 별도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

어, 학생들이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 등하교를 하는 형편이었다.

홍 의원은 “교직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고 대구시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 통학로 개설에 뜻을 모으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6개월간의 공사 끝에 통학로가 생겼다. 지역주민들은 “동네 사람들의 작은 민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는 의원”이라고 말한다.

디자인 개발 역량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하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이어 홍 의원은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찾았다. 성서산업단지는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단이다. 원형 진열대에 진열된 알록달록한 색상과 소재의 제품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면 에 배치된 ‘CMF(색상·소재·마감) 라이브러리’ 코너에서는 각종 디자인이 제품에 적용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CMF 라이브러리를 중



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심으로 회의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샘플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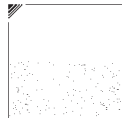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디자인 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개소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80억 원이 투입된다. 홍 의원에게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는 “전국에 총 7곳뿐인 센터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면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성서산단 제조기업들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대구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최근 문을 닫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소재부품 2.0 기술자립 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지원센터는 소재부품 기업들의 기술자립과 디지털·그린 산업전환을 위한 밀착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구 주민의 생활 속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노력

이날 오후 의원실에서 개최한 ‘성서산단-디아크(The ARC) 보행교 설치사업 주민간담회’에 가던 길에 홍 의원은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강창교(橋)에 들렀다. 강창교는 최근 3년간 25차례에 달하는 투신 시도가 발생하고 그중



안전펜스가 설치된 강창교



성서산단-디아크 보행교 설치작업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홍석준 의원

3명이 목숨을 잃어 ‘죽음의 다리’라 불렸던 곳이다.

홍석준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2021년 8월 이곳에 안전펜스가 설치됐다. 기존 1.1m 높이의 난간을 2.6m 높이로 높였다. 안전펜스를 설치한 이후 투신 시도 등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부지런히 펜스를 둘러본 뒤 “다행이고 뿌듯한 일”이라고 했다.

강창교를 지나 홍석준 의원은 서둘러 달서구 성서농협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보행교 설치사업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다. 디아크 주변에는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사문진나루터 등 대구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인접한 성서지역과의 연결통로가 단절돼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서산단-디아크 보행교 설치와 함께 카페, 전망대 등 수변공간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야생화정원, 피크닉광장 등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관광 수요를 창

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성서산단과 디아크를 잇는 보행교가 설치되면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등 디아크 주변에 분리되어 있는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서산단-디아크 보행교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홍석준 의원이 꿈꾸는 정치란 어떤 것일까 질문해봤다.

“이왕 시작한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먼 훗날 자라나는 청소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대구: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시을)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21대국회에 입성한 김회재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다. 김회재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김회재 의원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때 목회자가 되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특히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법대 진학 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30여년간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법의 목적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만 검사생활을 하면서 법을 통해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실현하려면 사랑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인권 확립은 물론, 법치 구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검사장 시절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이라는 복무 방침을 정해 검찰청을 이끌었고 퇴임 후 만든 로펌 이름도 ‘정의와 사랑’이었을 정도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가치 실현을 고민하며 살아왔다.

김회재 의원은 검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로 노무현 정부 초창기인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첫 번째 공약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과 직접 협의를 할 테니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위임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협의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았습니다.”

김 의원은 “6개월 정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경찰과 협상도 하고 국회와 청와대에 들어가 설명도 했다”면서 “결국 수사 관련 제도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최근 다시 검찰 개혁 이슈가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발로 뛰는 정치로 지역 현안 해결하고 국민 신뢰 회복”

국회 입성 후 김희재 의원은 민생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여수의 발전을 위한 SOC 사업 추진에 앞장서왔다.

“그동안 전라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없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간 다음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에 여수에서 서울 수서로 가는 전라선 SRT를 투입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1월 착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도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다.

“지금은 여수에서 순천, 광양을 거쳐 남해로 가는 데 1시간 반이 걸리지만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10분 거리입니다. 그간 열심히 뛰었던 덕분에 20여 년이 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올해 첫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전남 동부권의 관광객과 경남 서부권의 관광객이 동서로 오갈 수 있게 돼 관광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옮긴 김희재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세워진 지 50년이 넘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국비 약 1천700억 원을 확보해 저탄소, 구조고도화, 안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특별법(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대표발의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소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해주는 지역본사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재 의원은 “정의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정치입문을 결심했다”며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산단 특별법,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등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이 이재정 의원을 칭찬합니다



**“강단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는 분”**

이재정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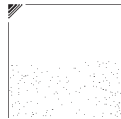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7월호 ‘칭찬합니다’의 주인공은 이재정 의원이다.

지난 달 그를 추천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주변에 이재정 의원을 이야기할 때 ‘알면 알수록 진국인 분이라고 강조한다’면서 “외통위 야당 간사 역할이 쉽지 않은데 묵묵하고 강단 있게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야를 떠나 이 의원처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김태호 의원님이야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칭찬이 쑥스럽다”며 웃었다. “김 의원님은 중진이신데도 항상 앞에 나서지 않으시고 뒤에서 그 일이 해결되게끔 조율해 주십니다. 또 초선이나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의 의견도 편견 없이 경청하시고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후배를 대할 때 그 사람의 고민을 더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20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재정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중에게는 ‘나는 꿈수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 모든 변론활동의 최우선 관심사는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해 모범사례가 되어 차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였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제가 정치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방송 출연을 하고 발제자, 토론자로 많은 토론회에 참석한 것, 청원서를 들고 국회를 드나들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 정치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떤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나서다 보면 항상 법 개정에서 막히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내 역할을 펼쳐야겠다 마음먹게 됐죠.”

이재정 의원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소방관 눈물뒹아주기 법’ 6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일을 꼽았다. 법안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독립된 소방청을 설립하고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다. 또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소방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소방관Go 챌린지’ 캠페인을 기획해 많은 의원과 연예인들이 동참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사회의 관심 덕분에 1년 넘게 계류된 법안이 마침내 2019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에게도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역 변화를 위한 안양교도소 이전, 1기 신도시 문제 해결, GTX-C노선 신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문제 해결 등 5

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1호 공약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안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역 현안 중 가장 야심차게 진행했고, 절반 이상의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안양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입니다. 단순히 넘비 시설 이전이 아닌, 시설 환경 차원에서 노후됐고, 제소자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일보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또한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안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공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막연하지만 ‘행복’이라고 답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들어올 때 제 아이가 17개월이었는데, 출근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항상 같은 말로 세뇌를 시켰어요. ‘엄마가 출근하면 어떻게 된다고?’라고 물으면 아이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라고 대답하도록요. 이제 꽤 머리가 커져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라고 웃으며 말대답도 하지만요. 정치가 때로는 삭막해 보여도, 희망을 갖고 노력하다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재정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로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추천했다.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복지나 제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보니, 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어떤 고민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업무와는 별개로 남다른 배려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믿음을 주는,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정치인이란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30년 행정 달인의 “국민 주름살 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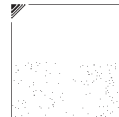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남구갑)

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 년 동안 공직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등에서 요직을 맡은 후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하고 있는 그는 “정치와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시 남구가 고향인 박수영 의원은 초·중·고를 부산에서 다니고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부모님이 모두 교사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공부하는 분위기였지요. 어린 시절 중고로 사주셨던 세계문학전집을 수십 차례씩 읽었고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을 동경하며 외교관을 꿈꿨습니다. 집에서 항상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으



셨던 부친 덕분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혀,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 ‘외국에서 살다 왔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외교관을 꿈꿨던 그의 뜻과 다르게 전교 1등, 전국 9등의 예비고사 성적이 아까웠던 담임교사가 외과학과가 아닌 법학과에 직접 원서를 내면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박 의원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1982년, 당시 지도교수는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었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사법고시를 보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교수님은 ‘너희들은 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받은 혜택만큼 돌려줘야 한다. 사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돼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정책으로 미리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아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그는 대통령비서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했다. 2009년 경기도청에서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후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독심으로 지금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냈다. 8년 동안 진척이 없이 흠먼지만 날리는 땅을 대한민국 IT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낸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6개월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회상했다. 그의 미래비전과 소신, 추진력은 그에게 ‘경기도의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뒤 고향인 부산 남구에서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초

평생의 은사로 모시던 박세일 전 이사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한걸음에 달려갔다. 박 이사장은 임종 직전 병실에서 ‘박…수…영…대…한…민국…잘…해라’라며 한 자 한 자 힘겹게 ‘유훈’을 남겼다. 이후 그는 박세일 전 이사장이 설립한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지내면서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연구했고,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생각은 확고하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기로 연임이 제한되는데, 국회의원도 연임에 제한이 없다. 연속 3회 당선된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에너지의 수요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기업에 확실한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는 침체한 비수도권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의원사무실은 썰렁하다 싶을 정도로 살림이 단출했다. 여느 의원실과 달리 업무 책상, 회의 테이블, 작은 책장 각 1개가 전부였다. 심지어 국회의원 명패도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임시직이다. 저는 공무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명패를 안 만들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일, 국민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마음가짐만 갖고 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 김영선 사진 김진원

저출산 문제 해결,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전세제도 개혁 방안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달곤·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5월 22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수산분야 중 양식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양식어업은 부업소득으로 규정돼 연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어로어업은 주업으로 인정돼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식량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되며,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아 규모가 매우 커,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마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필 KMI수산연구본부 연구원들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수산경영학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농·축산업 등 타 업종 대비 불공평한 수산분야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등 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양식어업 세제 개편 필요성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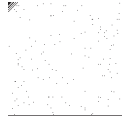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상희·최종윤·윤준병·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선·이달곤·이종섭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5월 23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미나에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이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기초발제를 한 후,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기업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 분석’, ‘정부와 기업이 Win-Win하는 이민 방향 모색’,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부족했던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민간 기업 등



이 관련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5월 2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건물분양주택 (토지임대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적은 초기 부담, 안정적 거주, 자산 축적 가능, 분양-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을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성 서울대 교수와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팀장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으며 세부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위한 건물분양주택 토지임대료 설정기준, 임대료 선납에 따른 최초 입주자의 주거비 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6월 2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 ‘이륜차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를 세심하게 진단했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교통안전 전문가, 배달종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정부부처의 역할, 교통안전 제도 개선 필요성,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등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6월 7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 의실에서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와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만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전세제도 문제점 진단과 전세제도 개혁 관련 입법 대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수빈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사무관,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은 과도한 깡투자로 인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된 전세금융, 정보불균형,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재 등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거나 관련 제도 개선이 부족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전세제도 전반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개선 방향으로 민간 월세와 장기공공임대 확대, 전세대출 축소 및 장기적으로 폐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가능한가’ 금융포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6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가능한가’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앞장섰던 전국금융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참석해 주 4.5일제 실시를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노동 시간 문제는 삶과 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미 주 4.5일제를 시행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소개하고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과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해당 근무제를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대 측을

설득하기 위해선 논리와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 기본 규범을 바꾸는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주 4.5일제 도입을 노동 시간 단축이 아닌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주 4.5일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대책 토론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 6월 15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방안과 농업용수 관리 정책 기능을 제고하고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학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광식 전남대 교수와 임경재 강원대 교수,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이 ‘가뭄 대응 통합물관리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용 저수지 홍수 대응방안’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이주현 중부대 교수 등이 ‘농업용수를 식량안보 통합 물관리 계획’,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물관리 방안 마련’, ‘대체수자원에 관련한 신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유기홍·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경태·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6월 19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가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각각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과 ‘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패널 종합 토론에서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등 참석자들은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등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용자의 인식 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대책 토론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6월 19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SNS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이 참석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에서는 김이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

장이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교육 현황을 언급하며 한계점을 언급하고 강사, 표준화된 강의 내용, 교육시간 확보, 필요예산 책정 등 개선점을 강조했다. 김미숙 서울보건교사회장은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규 교육과정 고시를 제안했다.

이태규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정책, 예산,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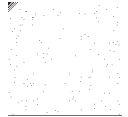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6월 21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주제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간병 피해사례 영상시청으로 시작으로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가 ‘급증하는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전정숙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베트남에서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는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박원숙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문간병인 제도의 필요성과 외국의 대표적 간병인 제도 실태, 우리나라 간병인력 운용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등 주제로 토론했다. 🏠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210건, 5.22~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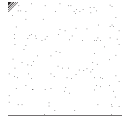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5.22(월)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이상헌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가 미래산업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	박덕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다함께돌봄센터의 현황 및 발전방안: ‘다함께돌봄센터’ 국회정책토론회	남인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수산분야 세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달곤,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5.23(화)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김윤덕, 김정재, 박덕흠, 박정, 이용호, 최인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태규 의원실	국회2소회의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소병철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지방소멸방지-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2024 총선, 남녀동수를 위한 토론회	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생활음악시대! 행복대한민국 포럼	황보승희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5.24(수)	성별 특성을 반영한 R&D 확산 방향: 포용적 연구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명희, 변재일 의원실, 국회 ICT 융합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최종윤, 김영선, 김상희, 이달곤, 이종섭, 윤준병,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윤석열 정부의 당면 국정과제와 개선방향 고찰 국회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회 본관3식당 별실
	자치분권시대의 지방소멸방지 및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이용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5.24(목)	편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류호정, 장혜영 의원실	국회 본관 223호
	윤석열 정부 1주년 기념,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	김영배 의원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허들 넘어 신시장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향 정책 포럼	조명희, 변재일 의원실, 국회ICT융합포럼	국회도서관 강당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시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	김정재, 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송석준, 김정재, 최인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5.25(목)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의 미래	노용호 의원실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	김영선,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 해양산업 상호 협력체계 구축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	우원식, 김경만, 이동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5.25(금)	지역MBC의 민성적자... 그 해법은 무엇인가?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현행 국적법 문제와 해결책: 국적자동상실제도를 중심으로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부울경 문화예술 교류 확대와 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한 토론회	박대출, 박성민, 정동만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김성주, 강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5.26(금)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김두관, 김승남, 서삼석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한반에서 찾다 5강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미래 간호인들이 말하는 간호법과 거부권 사태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토지임대부) 건물보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안철수, 김병욱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한반도경제 연속토론회 4차	이인영 의원실,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성평등을 향한 여정: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김영주, 김홍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기념 생태관광벨트 대토론회	조명희 의원실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최영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5.30(월)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1차: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다!!!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장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 기본법 제정 간담회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윤준병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환자안전과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현 시기 정신건강서비스 정책과 과제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춘숙, 고영인,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5.31(수)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8. 사이버보안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AI개발 및 활용 윤리와 글로벌 표준제정 한국내 법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포럼	김민석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김성주, 강훈식, 정춘숙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306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초거대 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주권	윤영찬, 변재일 의원실, 국회 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조승래, 김영식,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김상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강대식 의원실	국회박물관 2층 강당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차토론회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6.1(목)	인구 절벽으로 병원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	한기호, 이현승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윤미향, 소병훈, 서영교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	황보승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	김성환,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의사수 부족 현상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	강은미 의원실	국회 본청 223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소병훈,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M&A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토포보기	홍익표, 홍석준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 국회 정책간담회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박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2(금)	2023 상반기 한국지식재산가협회 정기 콘퍼런스: “지식재산(IP) 감점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세계 자전거의 날 국회 기념 행사	이윤범, 우원식, 김교홍 의원실, 국회1.5℃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론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고민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6.2(금)	경기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수달 보전 대책	안민석,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김상희, 인재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	윤두현 의원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소병훈,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23 세계환경의 날 포럼: Korea Day 친환경문화 국제교류 활성화전략	지성호, 박대수 의원실	국회박물관
6.5(월)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강훈식, 김병욱(국), 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중단 없는 강북구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협하다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탄소국경세 대비 소상공인 생존전략 소상공인과 ESG	서영교 의원실,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6.7(수)	EU의 사다리 건너차기와 금융업계 과제	김종민,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AI반도체와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심상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신현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한국의 금융 불평등: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박용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장혜영, 강민정,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이수진(비례), 이학영, 전용기, 이은주, 강성희 의원실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박찬대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	신정훈, 이달곤,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제8차 국회의원의 경제세미나: 한국 부동산, 무엇이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서영교, 서영석, 이수진(비례), 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데이터 분권 토론회: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권철승, 김두관, 김병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서범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8(목)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	국회철강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산불 피해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 토론회	윤건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김원이 의원실, 국회섬발전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김형동 의원실, 국회자원봉사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	서정숙, 백종현,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동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한강하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
6.9(금)	B-UAM 상용화 비전 및 서비스 전략 포럼	정동만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대응 정책토론회	이명수,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확충 토론회	배준영,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 세미나 1차 강연: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에너지 혁신 방안-SMR을 중심으로	국회 혁신4.0연구포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물순환촉진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이수진(비례) 의원실, 국회물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	남인순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가뭄 극복, 스마트워터그리드로 해결하자	김정재,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김민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6.12(월)	국가 기간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토론회	유익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중근의 삶과 꿈: 호국보훈의달 기념 조찬 특강	설훈,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윤영찬, 변재일, 전해숙, 이원욱, 양정숙 의원실, 국회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의원회관 제82간담회의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기상 기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대한민국 GPS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기업 Relocation 유치 전략 토론회	국회글로벌혁신연구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김교홍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지원 방안 간담회	고영인, 이용빈, 이용선, 하태경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이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미동맹 70주년 안보세미나: 한국형 핵억제 전략과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6.13(화)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	김민기, 김정재, 최인호, 강대식, 김두관, 민홍철, 박정하, 한준호,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	심상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강훈식, 김한규, 박상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정신질환자 자력·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을 중심으로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김병욱(민), 송기현, 유동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영호, 이태규,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14(수)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중광스님 작품세계 공유를 위한 학술세미나	송재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정성호, 김병욱(민), 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2차 토론회	안민석, 김용민, 송옥주 의원실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연속 간담회: 10. 차세대통신-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2023년 OSP Korea-GIFT 포럼: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시스템의 고도화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6월항쟁 36주년 토론회: 유신청산, 고문과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하여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의원모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방안-‘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분석과 대응방안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6.15(목)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	염태영,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	강대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사례보고대회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박주민, 강민정, 소병철,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지역 산업단지 지원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김두관, 민형배, 신영대,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202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	염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300만 반려인의 아름다운 헤어짐을 위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	유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23 지역공동체 활성화 심포지엄	김철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제5회 최신 기술 이해 제고를 위한 강연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융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홍문표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청년창업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비계량 소규모 분산에너지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김희재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6.16(금)	토권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윤주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32간담회의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D Y노선(인천공항행-김포행) 신설 국회토론회	김교홍, 유동수, 이재명, 허종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주거사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윤미향, 강민정, 강은미, 윤영덕, 이은주, 장혜영, 최강욱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3년 정책세미나: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과거사 젠더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및 입법 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조명희, 최재형, 이혜식, 배진교,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19(월)	이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	김민철, 김한정, 오영환, 최영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은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민철, 김병욱(인),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심상정, 윤호중,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유기홍, 홍익표, 조경태,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3회 UCAI 포럼 세미나: 금융 범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AI 협력 세미나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지하철 제연기능 현황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 과제	진선미, 신동근, 김영배, 이혜식,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92간담회의실
6.20(화)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남인순, 강훈식,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2간담회의실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92간담회의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 5천 2백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서영교 의원실	의원회관 제42간담회의실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82간담회의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조정훈,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42간담회의실
6.21(수)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2차 토론회	서영석, 백종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의원회관 제82간담회의실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제16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한기호, 신원식, 김병주, 기동민, 배진교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대외전략 리셋: 대안과 구상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62간담회의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남인순,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최영희,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6.21(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3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	안철수, 김종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11. 우주항공-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32간담회의실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2차: 의사 수요와 공급-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 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	신현영,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2간담회의실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	문진석, 민홍철, 이개호, 김민철, 허영, 천준호, 이성만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조승래,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제82간담회의실
6.21(수)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2023 민간보육의 현안과 유·보 격차해소 방안	윤후덕,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	김성원, 김희곤, 강병원,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도전과 전략	박대수,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초

국회 ‘화합의 꽃밭’에 일일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일일초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매일 한 송이씩 꽃이 피어, 일일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일일초의 꽃말은 ‘즐거운 추억’입니다. 일일초 꽃말처럼 매일매일 즐거운 추억이 생기는 올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의정부의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지하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도 의정부시을)·김한정(경기도 남양주시을)·오영환(경기도 의정부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시·도의원, 학계 전문가, 의정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 노선을 제5차(2026~203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현재 제4차(2021~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8호선 연장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km에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km를 추가로 잇는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곧 추진되며 의정부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GTX-C 노선은 수원시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양주시 덕정까지 74.8km에 이르는 광역급행철도노선이다.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6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의정부 구간을 경원선(1호선)과 같이 사용하려는 현재 방안은 소음과 진동 가중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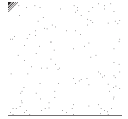
토론회 환영사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오랫동안

군사도시로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발전이 더뎠던 의정부에 드디어 GTX와 7호선 연장 등 여러 광역철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 논리로 인해 단선철도와 지상철 공용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계획은 백년지대계다. 한번 건설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마지막 열쇠인 8호선 연장과 110여 년의 동서단절 해소를 위한 GTX-C 노선 지하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최대 과제는 대중교통 기반 확충”이라며 “남양주 별가람에서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8호선을 추진해야 2024년 개통 예정인 교외선, 2025년 준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도봉산~옥정),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 GTX-B 노선 연계 등 경기북부의 대중교통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 북부 철도망인 8호선 별내선의 의정부 연장은 (경기남·북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지하철 확충은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며 “별가람~탑석 구간은 검토가 아닌 사업추진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70여 년간 계속돼 왔던 미군 주둔 부지의 반환으로 의정부시는 자족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수도권 순환철도



김민철·김한정·오영환·최영희 의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망의 단절구간을 해소할 수 있고, GTX-C 노선의 지하화는 지역 내 동·서 구역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출신인 최영희 의원은 “GTX-C 노선을 지하화하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정부시 원도심을 재생할 수 있다”며 “이동거리, 환승편의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논리 아닌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토론회는 원제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조응래 박사가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방안’, 동양대 철도대학 박정수 부학장이 ‘GTX-C노선 의정부시 구간 지하화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방현하 광역시설정책과장,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의정부발전연대협의회 정연수 회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민락·고산지구 등 의정부 동부지역 개

발에 따라 교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철도 공급계획이 없어 시민들이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경제 논리를 떠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GTX-C 노선이 기존 경원선(1호선) 노선을 공용으로 해 개통할 경우 소음·진동 문제가 심각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이 커지는 만큼 지하화를 검토하라는 의견도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정부 시민들은 ‘반쪽 짜리 7호선, 복선으로 건설하라!’, ‘GTX-C 지상운행은 의정부 차별’, ‘8호선 의정부 연장 조속 추진’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8호선 연장과 GTX-C노선은 모두 광역철도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토론회에 함께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성에 공감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정부 시민을 위한 철도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 고영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금년 5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021년부터 2건의 제정안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형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해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적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 공급체계를 고수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대형 화력발전소를 다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전환해야 하고, 송전망 확충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력 수요를 발전원 인근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는 분권화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대안이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에너지 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 관련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 중 분산에너지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활용한 중소형 원자력도 분산에너지로 볼 것인지 여야 의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특히, SMR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상현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2021.07.27. 발의) 및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2022.11.21. 발의)



SMR도 분산된 소형 발전원이라는 측면에서 분산에너지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사업에 포함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거친 이후부터 이 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들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로 정하고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관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 분산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분산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계통이 분산되면서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한,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출력제어 조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출력제어 조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셋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해당 지역에서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제도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거래해야 하는 일반 발전사업자와 달리, 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화지역에서 관련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분산에너지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전기요금제

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현재는 주택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제를 전국의 전기사용자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구가 밀집해 있고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한 수도권에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반면,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은 주로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 송·배전 비용 등이 반영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다만, 아직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후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수차례의 법안심사 회의 끝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체계가 분산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 법률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분산된 발전원을 통합·관리하는 통합발전소, 구역을 연동해 부족하거나 남는 전기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섹터 커플링 등 다양한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계통 운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나 계통영향사업자 등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때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

독일의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중심으로



이윤국
국회 독일 주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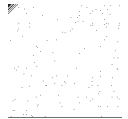
2021년 12월 독일 신정부 신호등연정(사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합의한 연정합의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전력소비의 80% 달성), 탈석탄 2030년 완료,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수소산업 육성 등을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연방경제에너지부에 연방환경부의 기후보호정책을 이관하여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기후 중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 등 경제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추진했다.

2022년 7월 부활절패키지 의결

이듬해인 2022년 4월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 법률의 개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일명: ‘부활절패키지’)을 발표했고, 7월 연방의회는 연방정부가 제안한 부활절패키지를 의결했다. 그해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사회로의 구조 전환을 촉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수십년 만에 최대 에너지정책 개혁으로 평가받는 부활절패키지는 재생에너지의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주요 법률 개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며, 2021년 기준 42%였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해 화석연료 수입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Windenergie-



auf-See-Gesetz), 에너지산업법(EnWG, Energiewirtschaftsgesetz), 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lG, Bundesbedarfsplangesetz) 등 개별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5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부총리)은 동 패키지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독일이 기후중립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해결과 러시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이라는 이중의 우선순위(double priority)를 가지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법(EEG) 등 관련 입법 동향

부활절패키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재생에너지법 2023(EEG-2023)은 '더 많은 기후보호를 위한 더 많은 재생에너지'(Mehr erneuerbare Energien für mehr Klimaschutz)를 표제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상승온도 1.5°C 이하 제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총예산 300억 달러를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에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은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공 안전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했으며, 그 목표를 2030년 약 600테라와

트시(T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력소비의 최소 80%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을 위해 경매물량을 대폭 확대하였는바, 육상풍력의 확대속도를 연간 10GW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총 115GW 규모로 설치하고, 태양광의 확대속도를 연간 22GW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총 215GW 규모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태양광 확대를 위해 다수 조치들을 패키지화해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이 약한 지역의 육상풍력 개발 등 육상풍력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참여를 확대하고, 수소 등 에너지저장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각종 전기요금 부과금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된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은 해상풍력발전 확대목표를 2030년까지 최소 30GW, 2035년까지 최소 40GW, 2045년까지 최소 70GW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전력망 연결, 각종 계획과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설치 절차를 신속화했다.

육상풍력에너지법(WindBG) 개정은 육상풍력발전에 독일 국토 면적의 2%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주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역 목표(지역 기여값)를 설정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을 위해 경매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법(EnWG) 개정에서는 에너지공급업체에 대한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의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종료로 고객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lG)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

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을 위해 연방전력망개발계획에 신규 전력망확충 프로젝트 19건, 기존 전력망 변경프로젝트 17건을 포함시킨 바 있다.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낮추기 위한 정책 추진

한편,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고,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2021년 기준 석유 35%, 무연탄 50%, 천연가스 55%)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안보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독일 북부에 육상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2기를 조기 건설하고,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 4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최초로 준공된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 건설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2023년 말까지 3개를 더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1975년 에너지안보법’을 개정해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방안과 에너지 분야 중요 기반 시설의 신탁관리 및 수용 등의 대책을 규정했다. ‘1975년 에너지안보법’은 제1차 오일 위기(1973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독일에서 에너지 공급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동 위협이 시장기반 조치로 대응할 수 없을 때 연방정부가 에너지의 공급,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시간적, 지역적 또는 양적 제한조치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법’을 개정해 지역가스시장관리자에게 가스저장시설 최소충전 수준의 저장량을 비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가스시장관리자를 대상으로 가스구매 및 저장을 위한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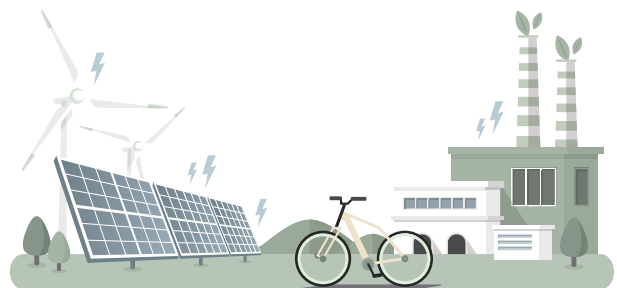
그리고, 전력계통에서 예비발전소로 보유 중인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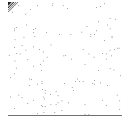
발전소를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예비발전소 가용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스공급위기 상황에서 최대 10기가와트(GW)의 발전설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2021년 기준 가스발전은 독일 전력생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 대상으로는 가스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약한 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재생에너지를 주요 안보 수단으로 인식

이와 같이 최근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주요 안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45년으로 한 것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2050년 목표보다 5년이나 빠르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달의 청원

현재까지 제21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34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은 70건, 국민동의청원은 64건이었다. 이중 지난 한 달 동안(5월 18일~6월 18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4건(의원소개청원 2건, 국민동의청원 2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동의청원인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은 단체교섭에서 기업별 교섭만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 간의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고 초기업(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등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 관련 법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3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음으로, 의원소개청원인 ‘치매관리법을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에 관한 청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관련법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을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5월 26일 강은미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돼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원소개청원인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법안에 관한 청원’은 한국이 2023년 1월 4일 국제협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으나 강제실종 범죄의 처벌 등 동 협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국내의 이행입법이 없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제실종 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6월 1일 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돼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선거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투표지에 QR코드 사용 금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및 투표 완료 후 즉시 수개표 실시, 국회에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6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양경수	환경노동위	5. 23.	국민동의청원
치매관리법을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에 관한 청원	공덕구 외 36인(강은미 의원 외 4인)	보건복지위	5. 26.	의원소개청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법안에 관한 청원	신희석(유상범 의원)	법제사법위	6. 1.	의원소개청원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오상종	행정안전위	6. 16.	국민동의청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PT 준비상황 점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논의

첨단전략산업특위, 포스코 그룹 광양 현장 방문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6월 7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시찰한 데 이어 여수 울촌산단에 위치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HY클린메탈 등 3개 업체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의동 위원장과 김성원·홍기원 간사를 비롯해 민형배, 서동용 위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위원(국민의힘)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산업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방문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도착 후 포스코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계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선두 지위 유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철강 산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포집·수소 환원 공정 등 첨단기술개발 필요성 등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스마트 고로(석탄과 철강선을 이용해 쇳물을 만드는 설비)’ 및 LNG 연료 추진선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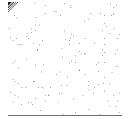
위원들은 이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및 포스코HY클린메탈에서는 리튬, 양·음극재, 리사이클링 등 이차전지 소재 산업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한 후 업체별 생산 공정 현장을 둘러봤다.

유의동 위원장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제4차 경쟁 PT 준비상황 등 점검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6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6월 20일 2030세계박람회(BIE)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PT 추진계획과 현지 홍보 전략을 검토하고, 유치교섭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파리 총회에서 제4차 PT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개최 역량과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후보지 실사 결과를 두고도 “모든 후보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4차 PT에서는 3차 PT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 실질적 매력과 혜택을 제안하겠다. 회원국이 체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의 외국어 소개 부분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위원(국민의힘)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홈페이지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엑스포 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신공항을) 건설하고 조기에 개항하도록 정부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논의

6월 15일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배출 기준치를 넘는 상태에서 해양에 방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 위원장은 이날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천여 개의 오염수 탱크가 있는데, 그중 70%에 이르는 탱크에는 배출기준을 넘는 오염수가 담겨 있고, 30%는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기준치를 만족하는 부분은 해양 방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치를 넘어가면 해양 방류 대상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위원(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대응이 다르냐”고 질의하자, 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 입장에서는 2021년 8월부터 팀을 꾸렸고 줄곧 같은 기조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자체 오염수 정밀분석과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석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자료는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과거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 전문가 소위에서 논의했던 오염수 지하 매설 등 다른 5가지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황운하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이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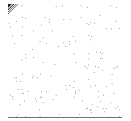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6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덕흠 위원(국민의힘)은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광우병 사태 때 다 겪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야당 때문에 88만 명에 달하는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장에 물을 채운 어항을 가져온 윤재갑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잉크를 어항에 부으면서 “여기엔 해류도 파도도 없지만 잉크가 다 번진다. 바다에서는 (오염수가) 섞이게 된다.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홍문표 위원(국민의힘)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김승남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검토 결과 제소나 잠정조치를 했을 때 패소하면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장기 과제



행정안전위,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비판

로 검토했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것”이라며 “방류 일정이 정해졌으니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6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홍)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전봉민 위원(국민의힘)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며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답변했다. 자녀 채용 13건 중 부친이 12건, 모친은 1건이다. 앞서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11건 이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10건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25명의 직원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들은 특히 선관위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위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과 관련,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헌재 판결만 잘 받으면 감사원 감사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웅 위원(국민의힘)은 “자녀 채용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감사과에 있다’고 대답하는 게 제정신인가. 선관위가 정치인들한테 자료 달라고 할 때 ‘사무실에 있다’고 답하면 선관위가 그냥 넘어가는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받고 채용된 간부 자녀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불법을 통해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버젓이 선관위 업무를 하고 있다면 누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철훈 사무차장은 “앞으로 성실히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

NEWS

김진표 국회의장, 제주포럼 참석 및 한·아세안 리더스포럼 환영 오찬 주재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올해 처음 기획된 제주포럼 특별세션인 한·아세안 리더스포럼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재했다.

한·아세안 리더스포럼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국회의원 및 기업들이 참석해 공급망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협력 등 주요 공통 현안을 주제로 의회 및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34년간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을 쌓아온 오랜 친구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복합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우리의 우정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가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리더스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아세안 국가와 특별한 협력을 위해 긴밀한 의회외교를 추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디지털 협력과 전기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두 지역 기업들과 창의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길을 적극 개척해나갈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양측 의회와 기업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역사적 진일보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찬에는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다토 하지 압둘 라만 아세안의회연맹 사무총장, 라바드라바드 필리핀 하원 의회관계의

교위원장을 비롯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각국 대표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12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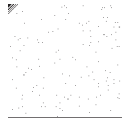
한편, 오찬에 앞서 제주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 국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포럼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리더스포럼’을 준비했다”며 “제주포럼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꿀 채밀 행사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6월 14일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꿀 채밀행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획됐으며,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에 3단짜리 벌통 15개를 설치해 100만 마리의 꿀벌을 나누어 기르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약 1천kg의 벌꿀은 향후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국회 공무원근로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영화의전당과 국회문화극장 관련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가 국회문화극장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보다 다양한 층위의 영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북한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국회문화극장은 국민과의 문화적 소통 창구를 목표로 10여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문화행사다.

국회사무처는 6월 23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및 영화의전당과 국회문화극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영화의전당 등 3개 기관이 문화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회문화극장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국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규정된 세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한 우수 영화 선정 및 수급(영화의전당),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북큐레이션 기획 및 추진(국회도서관), 영화 상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영장소와 장비 제공 및 사업 홍보(국회사무처) 등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회도서관과 영화의전당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영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회가 예산과 입법 과정을 통해 국내 영화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국회와 협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과도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 이후, 국회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상영, 영화 감독 또는 배우와의 대화, 심도 있는 영화 이해를 위한 북큐레이션 등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국회문화극장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개막식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3일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기록물을 통해 그의 정치 인생과 함께 반세기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등 전·현직 국회의장단 및 다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족 대표로 김종필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여사, 장남 김진 전 운영정학회 이사장과 김종필기념사업재단의 이태섭 이사장 등 국회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NEWS

김종필 전 국무총리(제11·31대)는 우리나라 최다선인 9선(제 6·7·8·9·10·13·14·15·16대) 국회의원으로, 유족과 김종필기념사업재단은 2019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의정활동 기록물 1천712점과 도서 2천939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기록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국회의원 당선 통지서, 제11대 국무총리 임명장 및 일지, 보국훈장, 미국 동성 훈장증 등을 포함하고 있어,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 전반을 망라하는 귀중한 정치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전시는 도입부 ‘사진으로 보는 JP의 생애’와 3개의 주제전시 ‘대한 육군, 김종필’, ‘정치 1막: 반세기 정치 여정의 시작’, ‘정치 2막: 현대사의 캐스팅 보터’, 특별전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JP’, ‘운정의 서재’로 구성되며, 사진, 문서류, 박물관, 도서 및 서예·회화 작품 등 4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은 개막일인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간 김종필 전 총리는 산업화를 설계한 주역이자 9선 국회의원으로,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바지하셨다”며 “이번 전시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열매를 맺는 일이지, 스스로 과실을 탐해서는 안된다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던 고인의 남다른 정치 철학을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영상으로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기록물의 기증은 개인의 사적 자취와 자산이 비로소 역사와 공적 자산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회도서관은 김종필 전 총리가 긴 정치역정과 의정활동을 통해 남기신 기록물들을 귀중한 정치 사료로서 고이 보존해 후대에 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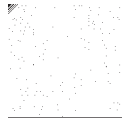
한 분석서인 ‘202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을 발간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원 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전담시켜 비용

추계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나아가 가결 법률의 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입법의 중기재정영향을 추계하고 입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관한 정보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국회의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 통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발간됐다. 특히 올해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의 특성을 고려해 수입법률에서는 법률별·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영향을, 지출법률에서는 분야별·성격별 재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보다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및 분석방법론을 소개했다. 제2장에서는 수입법률과 지출법률로 구분해 제안자·위원회·재정주체별 재정수반법률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을 식별하여 정리했다. 제3장 2022년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와 제4장 2022년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제안자·위원회·재정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입법률에서는 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점검 결과를, 지출법률에서는 분야와 성격별 점검 결과를 함께 수록했다. 끝으로 제5장 결론은 2022년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각 연도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종합해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6월 1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남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지역토론회는 지방소멸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및 입법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번 지역토론회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관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상철 처장, 김영록 지사, 김태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상철 처장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는 시급히 논의할 사안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하고,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대응방안’을,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이 ‘인구조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정광선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

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이찬영 전남대 교수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6월 8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공동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섬 지역의 활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고, 김원이 의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섬의 역사와 전통성, 정체성에 맞춰 각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배준영, 장동혁, 서삼석, 윤영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섬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제를 통해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

국방 과학기술 혁신으로 ‘강한 국방’ 만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1.4.1.]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3월 6일 본회의에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의결했다.

국방위원회 정재호 조사관은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참여기관과 기존 계약 방식에 더하여 협약 방식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미래도

전기술의 연구개발,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경우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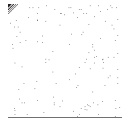
기존 ‘계약’ 제도 경직성 보완한 ‘협약’ 제도 도입

기존 ‘계약’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한 ‘협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성실한 연구를 했지만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국가계약법상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를 기존 핵심기술 사업에서 국방기술 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변화로 민간 산학연의 국방 R&D 참여는 법 시행 이전 20~30% 수준에서 약 65%로 확대(2023년 핵심기술사업 예산 기준)돼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에 효율적으로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기체계 소요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는 기존 R&D 체계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로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법 시행 이후, 총 80건(7천428억 원)의 미래도전기술개발 과제가 착수됐고 2023년에는 법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열린 국방과학 합동시연에 등장한 무인수색차량

시행 이전 대비 2천980억 원 증액된 3천5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은 첨단 신기술인 극초음속, 인공지능, 우주 등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텔스 무인기 같은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 소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기획 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국방 R&D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863개의 국방 R&D 과제를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국방기술기획서’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과 무기체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미래국방2030 기술전략’ 등을 발간하고 있다. 또, 군과 관련 업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방기술혁신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신기술이 국방 R&D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국가 R&D와 비교하면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개발목표 설정이 요구되는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한해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 시행을 통해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구 성과의 자유로운 활용에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의 중요성, 시장성을 비롯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국방 R&D 개발성과물 소유권의 민간 연구개발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 박민선



국회 본회의, 법률안 25건 의결

국회는 6월 21일 본회의(제407회(임시회) 제6차)를 열고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가 능케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 실태조 사 후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 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 례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 돼 왔다. 이날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 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잠정조치 유형 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하며,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 을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동거인·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 정(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범죄 피 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해 형사절차상 입 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시 그 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민 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 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돼, 이로 인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 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 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을 당사자 및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면허 등 자격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 사



6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개정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액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상환 의지가 있는 자의 신용 하락을 방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을 임의화해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법은 도지사가 감염병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고시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또는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규정해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변화한 부동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이 될 수 있는 주택 또는 시설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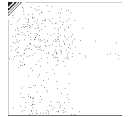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23 의결
국회본회의 2023-04-27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스마트폰 시대가 불러온 새로운 거리의 개념

모바일 기술



3년이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미덕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공중도덕은 개인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다. 세 가지 모두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행위들이다.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습관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해 보았다면 틀림없이 사람들 간격이 이전에 비해서 넓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인 거리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알고 있던 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폰이 거리를 측정하는 관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에 가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졸업한 대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고, 점심 먹으러 김밥집에 들르고, 은행에 가서 공과금을 납입하고,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사주는 등등의 일을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세기였다면 20km 정도를 다녀야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처리했다면 거리는 사라지고 만다. 물론 교통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결과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인 결과가 됐다.

이러한 기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구현된 사례가 있었다. 캐나다는 국토가 넓다 보니 앞에서 사례로 든 일들을 일일이 다니며 수행하는 데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러한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프로젝트명 ‘서비스 캐나다’라고 불리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국민들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정부 서비스 백화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 건물에



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적으로 해석해보면 구청에 가서 국민연금 업무나 학생들 전학 관련 교육청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건물이 필요했고, 부처를 실제로 이사해야 했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과 돈이 상당히 소요됐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IT의 고도화와 무선 인프라가 확산됐으므로 캐나다가 경험했던 절차를 건너뛰어서 스마트폰 속의 앱으로 정부의 모든 서비스가 모여들었다. 매년 대학 입시철이면 대학 입학 원서제출 마감 당시 현장이 뉴스에 단골로 등장했던 시절이 있었다. 여러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각 대학에 가서 직접 제출을 해야 했다. 각 학교와 학과별로 현장의 경쟁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감 시간 직전까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치작전 끝에 원서를 접수했던 추억이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했다면 1박을 하면서까지 엄청난 가족 작전을 펼쳐야 했다. 4인 가족이 4개의 학교에 원서를 제출했다면 가족이 이동한 거리는 실로 엄청나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면 총 거리는 왕복으로 대략 800km가 넘는다. 지금은 모든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쟁률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이 각종 데이터로 넘쳐난다. 눈치작전은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대체되어 좀 더 개인의 취향에 맞으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서를 접수하러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은 대학의 포털에 접속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불필요한 이동을 없애버렸다.

코로나19 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응을 해 왔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는 그러한 거리를 극도로 단축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은 환자와 병원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가 시중의 화두가 되었다. 오랜 기간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난제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짐에 따라 원격진료 또는 비대면진료로 불리는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으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회 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독감접종은 앱으로 예약접수를 한다. 이로 인해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시간 낭비와 현장에서의 감염을 줄일 수 있다. 환자와 병원 그리고 약국간의 거리도 좁혀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줄어든 이동거리를 운동으로 보충한다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객관성·공정성 지키며 시청자 사랑받는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만들 것”



송경철 국회방송 앵커

Q. 국회방송에서 지난 2월부터 뉴스프로그램 ‘국회라이브1’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국회방송에 어떻게기로 합류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라이브1’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YTN과 국회방송은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등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도 있어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해 국회방송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국회라이브1’은 제목에서 보듯 ‘1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정치뉴스의 1번지라는 자부심도 담았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30분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과, 정당활동 등 정치뉴스를 현장중계차와 리포트, 단신을 통해 전달하고, 다양한 정치 현안이나 이슈는 토론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지난 3월 27일부터는 ‘국회라이브1’이 OBS로도 동시에 송출되면서 시청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YTN에서 앵커를 하실 때와 국회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실 때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YTN에서 방송할 때 원고머리에 팩트, 균형, 존중이라고 써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도 뉴스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뉴스가 정통뉴스와 가십성 이야깃거리가 뒤섞이며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면서도 정통적인 뉴스 소재든 가십성이든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뉴스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인 YTN과 공무원 조직인 국회방송의 차이에서 오는 방송 제작환경이 다른 점이 있지만, 국회방송 구성원들의 방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은 누구에게도 못지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Q. 국회방송 뉴스를 진행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정치 한수’에 출연하시는 정치권 원로들과 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혼수(?)해 주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행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질 때 좀 더 고민하고, 통찰력이 물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께서는 박지원 전 원장의 카운터파트로, 서로 다른 요일에 나오시는데 민주화 운동과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촌철살인의 쓴소리를 여야 가리지 않고 던지는 ‘정치 한수’의 보배 같은 출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방송에서 첫 방송을 하면서 김진표 의장님과 한 인터뷰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전인터뷰에서는 현행 선거제가 승자독식과 양당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당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은 개편 첫날 성공적으로 잘 나갔고, 이후 의장님께서 “토씨 하나 지적할 게 없이 준비가 잘됐고 진행도 잘한다”는 취지로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Q. YTN 정치부 기자 및 앵커 시절에 보던 국회와 지금 곁에서 보는 국회는 어떤 것이 다르고 비슷할지도 궁금합니다.

A. 제가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한 것은 1999년 제15대국회였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도서관 정도만 있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국회는 외형적으로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 문턱이 높았지만 요즘 매일 아침 국회방송을 드나들면서 보는 국

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거의 매일 상임위나 공청회, 세미나는 물론 정당들의 각종 회의가 열리고, 외교사절이 수없이 드나들며, 수많은 민원인들과 전국에서 매일 학생과 유권자들이 방문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소통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의 정치부 기자 시절에는 국회방송이 없었기에 지상파나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국회 상임위 등을 생중계했지만 2004년부터 국회방송이 설립돼 청문회나 상임위 중계는 물론 뉴스와 일반 프로그램제작으로 소통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좋은 쌀과 반찬거리를 쏟아내지만 했다면 지금은 셰프들이 들어와 맛있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국민 친화적이고 언론 친화적인 국회로 변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회라이브1’이 신설 프로그램인 만큼 국회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언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진실과 정의가 위협받는 시기에 국회방송이 한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국회방송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기분야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 ‘국회라이브1’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과거 SBS와 YTN에서 창립멤버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설렘이 종종 떠오릅니다. ‘국회라이브1’이 국회방송의 근간인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달성하면서도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킬러콘텐츠로 자리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가성비의 시대가 불러온 콘텐츠 트렌드의 거대한 변화

“취미나 오락에서 쉽게 무언가를 얻거나 빠르게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멀리 돌아가는 것은 꺼린다. 방대한 시간을 들여 몇백 편, 몇 천 편의 작품을 보거나 읽는 과정,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기만의 관점을 얻는 과정, 결국에는 인생작을 만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 지름길을 찾는다.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간 가성비가 나쁜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타임 퍼포먼스가 나쁘다’라고 형용한다.” - 24쪽

2020년과 함께 시작된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20세기와 진짜 결별하게 되었다고 느꼈다. 팬데믹 이후 생활, 가치관, 감각, 예절, 문화 등 많은 것에서 거대한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미디어와 예술,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지만, 영화전공자 입장에서 지금 펼쳐지는 영화관의 쇠락과 미디어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OTT 시리즈의 활황이 영화의 확장이라고 개념 지으며,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학계와 업계의 눈물겨운 노력 속에서 눈에 번쩍 띄는 제목이 들어왔다.

일본 칼럼니스트 이나다 도요시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위트 있는 제목은 콘텐츠 과잉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행동이다. 이 책은 영화를 빨리 감아 보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미디어 산업, 세대론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양태, 포스트 팬데믹 문화 등 보다 큰 통



저 자 이나다 도요시
역 자 황미숙
출판사 현대지성
출판일 2022. 11.



찰로 나아간다.

우리는 지난 3년간 거리두기의 일상화를 겪으면서 OTT로 무수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했다. 한 번에 10~12부작 드라마가 공개되고, 완성도와 재미에 감탄하며 ‘이건 12시간짜리 영화야’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 보는 건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드라마 홍수 속에서 마지막회까지 몰입하여 볼 여유가 없다. 생계에 바쁘지만, 지인과의 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화제가 된 작품은 봐둬야 한다. 그래서 배속 감상과 건너뛰기를 선택해서 끝까지 본다. 부족한 부분은 스포일러를 친절하게 제공하는 유튜브를 시청해 보충하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위키트리를 참조한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슈가 된 드라마를 다 소화했고, 또래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서는 작품을 제대로 맛보지 못할 텐데” 같은 말은 낡대의 철 지난 수사로 보일 정도로 많은 이들이 빨리 감기로 작품을 대충 보아 넘긴다. 여기서 작품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작품 감상’이 아니라 ‘콘텐츠 소비’가 익숙한 시대다. 소비에는 실리적 목적이 따라붙는데 화제를 따라가기 위해,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등의 목적이 있다. 감상은 즐기는 것이고 소비는 패스트푸드처럼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시청 습관은 1990대 이후 출생한 소셜 네이티브인 Z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책에 인용한 데이터가 보여준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되

는 Z세대의 특징은 SNS를 잘 활용하고, 돈을 쓰는 데 소극적이고, 경험 소비를 중시한다. 공적인 관계보다 사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사회공헌에 신경 쓰며 출세보다는 안정을,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을 존중한다.

‘빨리 감기’는 적은 돈으로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으며, 사적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소재를 생산해 내는 데 유용하다. 또한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며, SNS에 과시하고 싶은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ESG를 중시하며 개성이 중요한 Z세대에게 콘텐츠 감상 후 워트 넘치고 개념까지 장착한 한마디 문장은 SNS에 ‘좋아요’를 누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다.

저자는 일본 경제 저성장의 늪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을 ‘빨리 감기’라는 현상에서 읽어낸다. 동시에 이러한 가벼운 현상을 만들어 낸 영상 콘텐츠 생산자의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중심 마인드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하지만 리퀴드 소비로 설명되는 ‘빨리 감기’와 ‘건너뛰기’라는 현대인의 습관을 문명의 진화에 따른 필연으로 설명하면서, 저자는 가급적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찌면 정당한 소비일 것이라고 본다.

이 책조차 무려 다섯 쪽에 걸친 꼼꼼한 목차로 모든 내용을 미리 알게 해 주는 패스트북 같은 느낌을 주지만, 젊은 세대의 콘텐츠 수용 양상이 알려주는 자본주의 문화의 현재에 대해 수많은 영감과 분석하고픈 이슈를 품고 있는, 쉽지만 강력한 콘텐츠다. 🍷

글 정민아(성결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독특한 성리학자 기정진의 '노사집(蘆沙集)'



‘노사집’은 조선 후기 독특한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奇正鎭:1798~1879)의 문집이다. 노사집은 노사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래지 않아 후손과 문인들에 의해서 간행되었으나 활자본이고 부록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아, 1902년 영남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완전한 문집인 목판본으로 간행했으니 22권 문집에 ‘답문유편’ 15권을 함께 간행했다. 문집이 간행되어 세상에 공개되자, 앞전의 어진이들의 성리설과는 다른 독특한 학설을 주장한 부분이 나오자 유림들 사이에서 문집을 훼손하자는 논의가 일어 한때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으니, 노사야말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성리학자였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때의 사정을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서 알아보자.

“노사 기정진은 조행이 독실하고 학문이 정밀 투철하였다. 그는 이기(理氣)를 논함에 전 시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아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터득하여 문빋장을 뽑고 자물쇠를 열어 정밀한 이치를 연구하여 학문 수준이 높았다. 그가 저술한 ‘납량사의(納涼私議)’ 등은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의 여러 학자를 모조리 끌어낼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율곡(李珣)에 대해

서도 불만의 뜻을 드러냈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는 성리학에서 호론과 낙론으로 갈려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며, 모두 자기파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던 시절에, 낙론이건 호론이건 모두 잘못된 이론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일반적인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다. 더구나 당시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으로 노론 쪽에서는 율곡을 후주자(後朱子)로 여기며 글자 한 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고, 남인은 퇴계를 종주로 여겨 어떤 이론도 반대의 뜻을 표현할 수 없던 때인데, 노사는 그런 당파나 학파와는 무관하게, 진리에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과감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현했던 독창적인 학자였다. 특히 그의 저술 ‘외필(猥筆)’에서 율곡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점으로 보면 확실히 특별한 학자였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성리학 6대가의 한 사람이다.

조선 중기 이후 교조적인 위상을 지닌 주자학에 대해 글자 한 자의 잘못을 지적해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세우던 시대여서, 율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사 문집을 훼손하자고 유림들이 모여 상소를 올리는 일까지 있었으나, 당시의 정부가 그런 문제에 관여할 겨를을



내지 못해 그냥 지나가고 말았었다니,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매천은 당시의 여론을 이렇게 언급했다.

“노사가 비록 율곡과 다른 학설을 세웠다 해도 스스로 자득한 바를 표출한 데 지나지 않다. 그대로 놓아두고 후세의 공정한 안목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찌 급급하게 동류를 결집하여 결판을 내려고 하는가?”

편협한 학문관으로 자기편의 학문 논리만 고수하려던 그런 시대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학설을 과감하게 주장한 노사. ‘노사집’은 그런 노사의 탁월한 진리탐구의 정신이 담겨 있어 국보적인 문집임을 알아보게 된다.

“이전 시대 사람에 의지하거나 아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터득하여 문빛장을 뽑고 자물쇠를 열어 정미한 이치를 연구하여 학문 수준이 깊었다”라는 황현의 평가는 노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노사집’의 고전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해 준다. 황현의 막역했던 친구, 조선 후기 당대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영재 이건창의 노사에 대한 평가도 ‘매천야록’에 남아있다.

“노사의 문장을 말한다면 논학(論學)이 제일이요, 편지가 다음이요, 서(序)·기(記)·발(跋)이 또 그 다음이라 하겠다. 그러나 의리(義理)에 통명하고 학문에 정숙(精熟)함에 있어서는 어찌 조선 근세에 보기 드물 뿐만이겠는가. 저 중국에서 찾아보아도 이에 짝할만한 이는 얻기 어렵다”고 평해 중국에서도 그런 학자는 찾기 어렵다고 했으니, 노사의 학문이 얼마나 깊고 높았는가를 설명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 영재 이건창은 노사를 숭모하는 시에서 ‘정심조도무전배(精心造道無前輩)’라고 하여 정밀한 마음으로 도를 이룬 업적은 옛 어른들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선 최고의 독창적인 학

자였노라고 송양의 뜻을 밝혔다고 여긴다.

노사는 평생 동안 벼슬살이를 싫어했다. 학문이 높은 선비를 산림(山林)으로 추천해 벼슬을 내리는 일처럼 선비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젊은 시절 낮은 벼슬에 겨우 6일 동안 근무한 이래로, 참판의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사양하고 오직 학문연구와 제자 양성에 온 정성을 바친 참으로 순수한 학자였다. 비록 학문연구를 위해 벼슬은 거부했지만 당시 썩은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놓은 적이 없이 불타는 애국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 삼정문란이 극도에 달해, 망국으로 치닫던 나라를 잊지 못하던 노사는 마침내 철종 12년 삼정문란의 해결책에 대해 고뇌에 찬 심정으로 상소를 올렸다. 그 상소에서 노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해결책이 들어있다고 말하며, 임금은 하루 빨리 ‘목민심서’를 구해다 읽어보시고 그것을 정부에 내려 정부가 다산의 주장대로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펴서, 탐관오리들을 징치하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목민심서’가 어떤 책인가. 보수적인 일반 유자들은 다산이 서교에 물든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을 읽고 그대로 시정을 펴야 한다고 했던 노사. 보수주의 노학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노사집’은 우리의 고전이기에 너무나 정당하다. 요즘 같은 개명한 시대에도 ‘목민심서’를 읽지 않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펴던 노사 기정진, 역시 참다운 학자였다. 그래서 ‘노사집’은 문집 중에서도 특별한 문집임을 기억해야 한다.

“문 달으니 심산(深山)이요 책 펴니 사우(師友)로다
오란 데 없건마는 흥(興) 다하면 갈까 하노라”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노사가 읊었던 시조 한 수를 보면 그의 학문을 짐작할 수 있다.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국회 미술관은 국회에 전시된 미술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윤리의 나라 조선의 다산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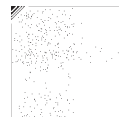
김신일의 '다산의 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국회의 건축물 미술작품이다. 새 집을 지으면서 그 뜻에 맞는 작품을 설치하는 법제도에 따른 미술작품이라 어떤 의도로 무슨 작품을 세웠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건축과 미술,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공공미술 작품과는 사뭇 다르다. 건물 앞에 우뚝 선 조형물이 아니라 벽에 걸린 부조 작품인 데다가, 문자를 겹쳐서 쌓아 올린 개념미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제작자 김신일은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명실상부한 조각가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조각이 없다. 그는 금속 패널을 잘라 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이어 붙이거나 겹쳐서 부조나 환조의 조각 작품

으로 마무리했다.

조소예술가들의 작업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경로와 방법

그러니까 그는 대중이 조각가라고 부르는 예술가들, 정확하게는 소조나 조각 작업으로 입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조소예술가들의 일반적인 작업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풀어낸다. 작업의 개념을 세우고 작업의 과정과 방법을 구상한 후, 한 장의 드로잉을 마치면 그것으로 예술가 김신일의 작업은 거의 완성에 이른다. 이후의 과정은 기계적인 금속 절단과 용접, 도색 등의 제작 과정이다. 물론 작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도의 예민함으로 창작 과정을 지휘하는 것이 예술가의 책무이자 윤리이지만, 어쨌거나 작가의 손





김신일, '다산의 꿈', 알루미늄, 90×40cm(4점), 우레탄 도장, 2013.

을 떠나 작업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김신일의 작업은 일반적인 조각가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창작 방법이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은 전통적인 손작업 중심의 조각이 아닌, 개념미술 작품이다. 이런 경우, 작가의 의도를 따져보는 것이 작품 이해의 지름길이다. 이 작품 '다산의 꿈'은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담긴 4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1818년(순조 18)에 지은 책이다. 48권 16책으로 이뤄진 이 책은 공직자의 덕목을 밝혀놓은 책이다. 목민관으로서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상세하게 적은 것이다. 이 책에는 12가지 항목이 들어 있다. 부임(赴任)·율기(律己)·

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등이 그것이다.

찬찬히 들여다보며 생각하게 하는 개념미술

영어 단어 스펠링의 로마자 하나하나를 철판 커팅 문자로 만들고 이를 차곡차곡 겹쳐서 사각의 틀 안에 겹쳐 놓은 4개의 사각형 패널이 이 작품의 전모다. 김신일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이뤄진 영어 단어로 이 작품을 만든 것은 단박에 읽혀 그 뜻을 새길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념미술의 존재 이유다. 4개의 부조 패널은 다음



국회 의원회관 2층 복도에 걸려 있는 '다산의 꿈'

단어의 스펠링이 겹쳐져 있다. DECENT CONDUCT, INTEGRITY MIND, SAVING EXPENDITURE, LOVING PEOPLE. 영어 단어들이라 언뜻 와닿지 않는다. 작품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 DECENT CONDUCT: 국민을 대함에 있어 항상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함
- INTEGRITY MIND: 자신과 남을 속이는 마음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공직에 임함
- SAVING EXPENDITURE: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재산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짐
- LOVING PEOPLE: 국민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짐

풀어쓴 한글 문장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리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김신일이 제시한 영어 단어들을 다산 원전에 나오는 한자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DECENT CONDUCT: 율기(律己)/INTEGRITY

MIND: 봉공(奉公)/SAVING EXPENDITURE: 진황(賑荒)/LOVING PEOPLE: 애민(愛民)” 오늘날 공직자 윤리 덕목으로서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진황은 공공기금을 비축해 재난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공간에서 다산의 목민관을 호명하는 일은 이 시대의 공직 윤리를 되새기고자 함이다. 학문과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왕권과 관료 체제 아래 있던 봉건왕조시대에 조선은 윤리적 이상으로 국가를 꾸려나가고자 했던 유교의 나라다. 인간의 윤리적 각성과 법적 제도로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조선은 18세기 들어 급격히 쇠락했다. 정조의 급작스러운 사망 후 세도정치가 이어지고, 제국주의의 서세동점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다산이 이 책을 집필한 시점은 이렇듯 위기의 시간이었다. 2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김신일의 작품을 보며 이 시대의 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광주시립미술관장)

아이를 춤추게 하는 국회 어린이박물관



아이에게 국회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 국회어린이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국회에서 하는 일, 법률이 필요한 이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도희(서울시 영등포구)

복장이 그게 뭐예요! / 제대로 입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에서 의(衣)는 옷을 말하며, 복장(服裝)이란 옷을 차려입은 모양, 즉 옷차림을 뜻한다. 주로 남성이 입는 서양식 의복인 양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00년경이며, 근대기를 거쳐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화된 정장으로 정착했다. 제헌국회 이승만 초대 의장은 한복을 입고 개회사를 했고, 개원식 참석자의 대부분은 양복 차림이었다. 제헌국회부터 제6대국회까지 의원들의 복장은 한복과 양복이 혼용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3대국회 제19회 제75차 본회의 회의록에는 점퍼를 착용한 의원이 정장 차림을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장면이 있다. 월동용 연료대책에 대한 대정부질문 중 유엔 총회의 남북 총선거 결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박영출 의원이 외전(外電)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자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한 후의 발언 내용이다.

제3대국회 제19회 제75차 본회의(1954.11.10.)

○박영출 의원 저는 오늘 이런 발언이 있을 줄 모르고 복장을 준비하지 못하고 와서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죄합니다.

(백색 잠바를 착용하고 등단하였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히 발언권을 주시도록 요청해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38선에서 공산이적이 쳐미러 온다고 하는 어떤 소식을 드릴 때에는 어떤 행동을 표시해야 될 것인가, 그 소식이 공식보고 어떤 사적 비공식인 보고…… 보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는 양복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도 양복의 착용이 보편화됐고, 국회에서

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 정장을 해야 한다는 안건이 논의됐다. 제6대국회 제44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발언 시 정장의 건이 제안됐고, 제44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발언 시 복장에 관한 건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제6대국회 제44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1964.7.22.)

-본회의 발언 시 정장의 건-

○김익기 위원 국회본회의의 발언은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부위원이나 행정부에 있는 국무위원이나 또는 국회 결의에 의해서 전문위원이나 또는 증언을 하는 분들이 복장을 너무 간소화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본회의에서 강연이나 또는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국회의 존엄성이나 국민에 대한 예의 또는 외국사람들에 대한 체모 등으로 보아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는 국회본회의의 발언자나 수하를 막론하고 정장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의해서 의장에게 통고해서 의장은 국회에 공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용순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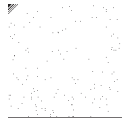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김익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국회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정장을 하고 발언할 것을 결의해서 의장에게 통고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국회 제44회 제9차 본회의(1964.7.27.)

-본회의 발언 시의 복장에 관한 건-

○의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찬동을 얻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올시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그 복장을 누구든지 정복을 하자는 결의올시다. 양복은 상의와 넥타이를 매고 한복은 두루마기



를 입는 이러한 정도의 정복을 해야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규를 정한 모양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의사당의 엄숙성과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이 결의를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거 여성 정치인은 치마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1993년 바지정장 차림으로 국회에 출석한 여성 장관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15대국회에 들어 십여 명의 여성 의원들이 바지 정장 입기 운동을 결의하기도 했었다.

제16대국회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면바지와 노타이 차림 때문에 의원 선서가 그다음 날로 연기되기도 했다.

제16대국회 제238회 제8차 본회의(2003.4.29.)

○의장 박관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오경훈 의원, 홍문종 의원, 유시민 의원, 이상 세 분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이 그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내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미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복장문제에 관한 국회의 관례를 설명하게 했고 본인도 알겠다는 확답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세 분은 의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용히들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당 총무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뜻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되면 회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일 첫 의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대국회 제238회 제9차 본회의(2003.4.30.)

○의장 박관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선서를 못 한 세 분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에게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홍문종 의원, 유시민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다음,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의원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갑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오늘 제 옷차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도 제대로 입었습니다.

어제 제가 옷을 그렇게 입었던 이유는 튀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넥타이 매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더욱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복장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법 제25조¹⁾에서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복장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제21대국회 들어서 2030세대 의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는 조금 탈피한 것 같다.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살피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옷차림의 정치도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게 잘 어우러지기를 희망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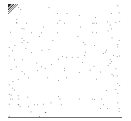
글 유점임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1과)

1)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드넓은 초원, 바람결 따라 야생화 춤추네

선자령 ‘바람의 언덕’





바람이 그리운 계절이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을 찾아 열기를 식히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인공적인 바람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이럴 땐 한줄기만으로 가슴속까지 청량하게 적셔주는 대자연의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나라에서 ‘바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강원도 평창 대관령이다. 그중에서도 ‘바람의 언덕’으로 불리는 선자령이야말로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을 타고 시원한 대자연의 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오는 바람의 나라다.

선자령하면 겨울철 눈꽃산행이나 설원의 백패킹을 먼저 떠올린다. 워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이국적 풍경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자령의 진면목은 봄 또는 여름에 가야 마주할 수 있다. 하얀 눈 속에 감추었던 진짜 매력을 만

날 수 있어서다.

이즈음 선자령은 야생화의 천국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생화 산행지는 점봉산 곰배령과 백두대간 금대봉이 잘 알려져 있지만, 선자령의 야생화도 뒤지지 않는다. 드넓은 대초원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선자령의 키 작은 야생화들은 바람결을 따라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햇살이 눈 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김광석의 노래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찾아, 선자령 ‘바람의 언덕’에 좌표를 찍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강원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선자령은 구름도 쉬어간다는 대관령 북쪽에 우뚝 솟은 산이다. 백두대간을 잇는 주요 등산로이자 해발고도가 1,157m로 대관령보다 높다. 산행을 하려니 덜컥 겁부터 먹기 쉽다.

그런 마음일랑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산행 기점인 대관령마을휴게소(옛 대관령휴게소)가 해발 840m에 자리 잡고 있으니, 정상까지 해발 300m만 더 오르면 된다. 거리상으로도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4~5시간이면 왕복이 가능하다. 게다가 등산로는 동네 뒷산 가는 길 만큼이나 평탄해 큰 어려움이 없다. 난이도는 약하면서도 정상에 오르면 백두대간의 장쾌한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풍경맛집’이다.

산행의 시작은 구 영동고속도로에 자리한 대관령마을휴게소에서 시작된다. 현재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강릉대관령휴게소와는 엄연히 다른 곳이니 혼동하지 말자. 이곳엔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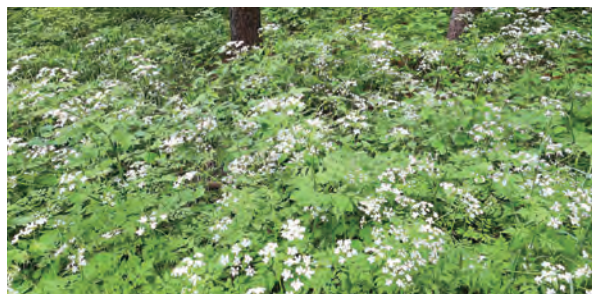
강원도 평창 선자령

산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에 좋다. 경사가 완만해 겨울이 아니라면 특별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름철이라도 해발고도가 높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막이 재킷 하나쯤 챙겨가는 것이 좋다.

산행은 정상을 찍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환코스다. 능선길과 계곡길 두 갈래다. 원래 능선길 하나였지만 숲속에 길을 조성해 두 갈래 코스가 됐다. 어느 코스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능선길은 풍광이 시원하고, 계곡길은 아늑해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산행에서는 백두대간 마루금인 능선길로 올랐다가 숲이 아늑한 계곡길로 하산하는 쪽을 택했다.

대관령마을휴게소 위쪽에 산속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숲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오르면 곧 능선길에 올라설 수 있다.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된 임도를 따라 걷기도 해서 다소 심심하고 실망스럽다. 다행히 길 옆에 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무료함을 달래준다.

임도를 따라 걷다 KT통신중계소를 지나면 본격적인 산행길이 이어진다. 왼쪽 숲으로 들어서면 아늑한 오솔길로 접어든다. 이 숲길에서부터 천상의 화원이 펼쳐진다.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고 진다. 흰색 꽃잎에 까만 반점이 있는 개별꽃, 연둣빛 고양이 눈을 닮은 산팽이눈, 수줍은 새색시를 닮은 얼레지,



야생화군락

고깔모자를 쓴 고깔제비꽃, 하늘빛 머금은 현호색, 또 홀아비바람꽃, 평의바람꽃, 만주바람꽃, 회리바람꽃 등 야생화의 천국이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나무들은 조금씩 키를 낮춘다. 능선을 타고 넘는 매서운 바람을 피해 몸을 움츠리고 있다. 길 양옆의 키 작은 나무들은 양팔을 벌려 손을 잡고 하늘을 가린다. 마치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다. 갈림길이 나타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다소 가파르지만 새봉전망대를 거쳐 선자령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전망대에 서면 맑은 날 강릉 시내와 동해의 파란 물결, 대관령 일대의 명산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눈을 돌리면 남쪽으로 가리왕산~고루포기산, 북쪽으로 황병산~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장쾌한 마루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동해서 부는 바람, 백두대간 타고 풍차 돌리다

전망대에서 선자령 정상까지는 2.5km. 다시 숲길로 접어든다. 숲을 지나면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푸른 하늘 아래 거대한 풍차(풍력발전기)와 드넓은 초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바람이 주인이 되는 곳, 여기에서부터는 선자령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 실 새 없는 바람에 주변의 수목과 풀들이 춤을 추거나 한쪽 방향으로 드러누워 있다. 먼바다에서부터 출발한 바람이 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넘는 통로여서, 사시사철 바람이 그칠 날이 없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풍차를 돌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일대에는 50여 기의 풍력발전기가 있다. 선자령 풍차길 위 거대한 풍차들은 온몸으로 바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사방이 탁 트인 풍차길은 제법 가파르다. 하지만 풍차와 초원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에 오히려 발걸음



이 가볍다. 초원지대를 지나 산등에 올라서면 ‘백두대간 선자령’이라 쓰인 거대한 정상석이 우뚝하다. 웅한 공터에 우뚝한 정상석이 좀 허전하지만, 백두대간 종주자들에게는 선자령 정상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포인트여서 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하산은 반대쪽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면 된다. 봉우리 아래엔 드넓은 초지 사이로 목장길이 나타난다. 목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일목장과 대관령휴게소 갈림길을 지나 재궁골로 내려선다. 여기서부터 계곡길이 시작되고 물소리, 새소리를 벗 삼아 걸을 수 있다.

숲속에는 전나무와 구상나무, 낙엽송 금강송이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 있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진한 피톤치드 향에 금방 머리가 개운해지고 산행의 피로도 사라지는 기분이다. 계곡 중간에서 운 좋게 어른 서너 명이 두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는 거대한 아름다리 거목도 만날 수 있었다. 죽히 수백 년, 아니 그 이상은 되어 보여 신비로움마저 들었다. 선자령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면, 분명 이 거목일 것이라는 생각에 산꾼들이 쌓아

놓은 돌무더기 탑에 돌 하나 살짝 보탰다.

계곡길에는 습지를 복원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재궁골 상류부터 하류까지 복원해 놓은 습지엔 작은 조릿대 줄기처럼 생긴 속새를 비롯해서 미나리, 끈끈이주걱 등이 자란다. 선자령(仙子嶺)이란 명칭은 계곡이 아름다워 선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놀다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유래했다는데, 이곳을 두고 그랬을 것이리라 혼자 상상해 본다. 하산길 끝은 양떼목장을 지나 옛 대관령휴게소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대중교통은 불편하므로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버스는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행 직행을 타고 횡계에서 하차한 뒤 택시나 대관령 노선버스를 이용한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횡계 IC → 지방도 465번도로 → 옛 대관령 휴게소로 가면 된다. 넓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비는 무료다.

존대법의 어려움

아무리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존대법은 쉽지 않다. 문장도 그리하려니와 발화 현장에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상대방에게 무례를 저지르게 되니 늘 조심한다. 말을 해 놓고도 자신의 발화에 실수가 없는지 조심스러워한다. 우리말은 워낙 존대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애를 써서 공부를 해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 규칙이 영원히 지속되는 법은 없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드리다’를 예로 들어보자.

가. 어머니께 옷을 걸쳐 드렸다.

나.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보인 ‘드리다’는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드리다’는 기본적으로 ‘주다’의 높임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에서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이다. ‘걸쳐 주다’의 높임말이 ‘걸쳐 드리다’인데, 이럴 때 높이는 대상은 옷이 아니라 어머니다. ‘걸쳐 주다’의 ‘주다’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걸쳐 드렸다’의 ‘드리다’는 보조용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해 (나)는 ‘드리다’를 동사로 사용한 예다. 신에게 비는 일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다)는 ‘축하드리다’가 하나의 단어로 취급된다. ‘말씀드리다’나 ‘감사드리다’와 같은 경우다. 최근 어떤 분에게 받

은 질문 중 하나인데, ‘축하드리다’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존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축하하다’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표준 화법 해설’(국립국어원, 1992)에서는 불필요한 공대로 보아 ‘축하하다’가 어법에 맞다고 해설했다. 그런데 ‘축하드리다’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다 ‘축하하다’보다 더 존중과 공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자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 2011)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어법에 맞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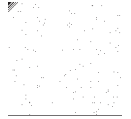
비슷한 표현의 존대법은 젊은 세대에게는 더 어렵다. 최근 대학생이 쓴 글을 읽다가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

라. 과장님께서 지금 저에게 (가)라시는(*가시라는) 말씀이군요.

위에서 보인 두 단어는 존대의 대상이 다르다. ‘가라시느’이라고 쓰면 과장님을 높이는 말이고, ‘가시라는’이라고 쓰면 존대의 대상이 ‘나’가 된다. ‘가라시느’은 ‘가라고 말씀하시느’이 줄어서 된 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을 존대하는 것이 되지만, ‘가시라는’은 ‘가다’의 원형에 존칭을 의미하는 ‘-시-’가 붙은 단어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단어가 비슷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혼용하기 쉬워진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존대법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생각이나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하는 언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7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1.5°C의 눈물

2023. 7. 3. - 7. 14.

작가 : 전창환 | 추천 : 엄태영 의원실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2023. 7. 17. - 7. 28.

작가 : 이난영 | 추천 : 김용민 의원실

김진표 국회의장 헝가리·체코 공식 방문, 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등

6월 1일	• 여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정부 대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논의
6월 2일	• 여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 진행
6월 3일	• 김진표 국회의장, 6박 8일간 헝가리·체코 공식 방문
6월 4일	• 김진표 국회의장, 인도 동부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와 관련해 옴 비틀라 인도 하원의장에게 위로전 보내
6월 7일	• 대한민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11년 만에 재진입
6월 8일	• 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경력 채용 의혹과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 열기로 합의
6월 12일	•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6월 13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실시 •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6월 14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철민 교육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6월 15일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1일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
6월 19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6월 20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3대 정치쇄신 과제'를 밝히고 야당에 공동서약을 제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실시
6월 21일	• 김진표 국회의장, 7박 9일간 피지·뉴질랜드 공식 방문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 정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6월 23일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가락농수산물시장 횡집에서 만찬 가져
6월 25일	• 더불어민주당,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6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한국의희망' 창당 공식 선언

정리 윤성혜

가슴에 남는 한 권의 책이 있나요?
책과 인생 이야기가 함께 하는 공간



금요일 밤 10시



이시한 작가
(성신여대 겸임교수)



이지애
(전 KBS 아나운서)



권진영
(개그우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